KMI 현안연구 요 약

2018
제27호

발간년월 2019년 4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 부연구위원
(jwhong@kmi.re.kr/051-797-4721)
윤인주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부연구위원
(mouthpiece@kmi.re.kr/051-797-4724)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정아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최근 들어 가장 큰 라이프 스타일 변화의 하나로, 휴식이 있는 삶과 소비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역 휴양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자연 자원과 지역 환경을 국민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려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산림치유정책과 산림복지정책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해양 부문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한 휴양 및 치유,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2.2%는 바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74.1%는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가를 찾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휴식과 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 및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관광산업은 휴식과 쉼, 건강과 힐링을 주요 테마로 하는 웰니스 관광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림, 한방, 뷰티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 웰니스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은 국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양치유를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로 대중적인 대체의학으로 인정한다.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도 해양치유를 보완대체요법으로 인정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낙후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해양치유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자원을 이용한 휴양 및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책은 산림 부문에 비해 최근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해양 부문 복지정책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 수요 증가로 향후 정책 방향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10월부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국민 휴양 및 복지 증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미 4개의 협력 지자체를 선정했다. 해양휴양·복지와 해양치유에 관한 인식조사(2018년 8월 2~9일, 557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 및 복지서비스 정책 추진 방향은 1) 해양치유에 대한 인식 확산을 바탕으로 한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공간 조성, 2)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3) 해양치유정책 추진 기반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해양치유정책 도입을 위해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및 공감대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다음으로 연안지역의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치유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치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부처 간,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관광산업, 휴식을 바탕으로 한 웰니스 시장 급성장

■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은 2020년에 8,080억 달러로 연 7% 성장 예상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부담, 자연을 활용한 치유와 휴양 문화의 성장 등으로 이와 연계한 웰니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세계 웰니스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3.7조 달러로 전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하는 중요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 웰니스 산업 중 웰니스 관광시장은 세 번째로 큰 분야로 2015년 기준 5,630억 달러 규모이며 2020년 까지 연 7.5% 성장하여 약 8,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 향후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시장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임

■ 국내 웰니스 관광시장은 한방, 뷰티, 스파, 산림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 웰니스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웰니스 관광지 25선을 선정하여 홍보 및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8곳을 신규로 추가하여 현재 33개소의 국가 선정 웰니스 관광시설이 운영 중임
  - 2017년 웰니스 관광 25선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은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대비 13% 상승한 수치임
- 선정된 관광지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여행상품 개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
- 2018년에는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로 선정·육성할 예정이며, 이 중 통영, 거제, 고성을 중심으로 해양 웰니스 관광을 육성할 계획임

세계 각국에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확산

■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로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을 적용

- 프랑스 내 해양요법 시설은 83개이며 매년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음
  - 랑그독-루시용, 아키텐, 라 볼 지역 등은 해양리조트 및 대중관광지로 개발됨

- 프랑스 해안의 해양치유는 지리와 기후의 차이로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치료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 프랑스 해양요법 센터는 민간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로부터 품질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음
  - 현재 프랑스 전역에 프랑스 탈라소로부터 인증을 받은 해양요법 센터는 37개소임

■ 독일은 해양치유를 질병예방 및 건강회복 등 복지정책 수단으로 활용

- 독일은 연안 지역에 위치한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Kurort, 치유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 350개소 이상의 쿠어오르트 중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는 32개소 이상임
  - 해양치유 쿠어오르트 이용자는 35.4%로 2번째로 많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이용자 증가율이 가장 높음
- 독일은 해양치유의 질병예방 및 재활 효과를 인정하고 사회보험으로 이용료를 보전하고 있음
- 독일해양치유협의회는 해양치유 시설 인증, 관리·운영 규정 설정을 담당하며 시설 입지, 인프라, 자원 등을 기준으로 시설을 9개 범주로 구분·인증함

■ 일본,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수단으로 해양치유를 활용

- 일본은 1990년대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도입됨
  - 초기에는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자연환경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랑스식 해양요법 시설을 도입함
  - 일본의 해양치유 관련 시설은 26개소가 운영 중임
-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및 재활, 개호(介護)예방 및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함
  - 해양치유를 지역의 노인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증진, 회복, 치유,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도입·활용함
- 일본은 해양치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 지역 대학 및 해양치유시설 종사자 등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성장함

우리나라에서 해양 치유정책은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

■ 산림청은 2000년대부터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지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국내 산림복지정책은 「산림기본법(20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015)」을 통해 체계화됨
  -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산림복지·치유의 개념을 확립하고, 산림치유 공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복지종합계획('13~'17)'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산림복지정책이 통합되었으며, '산림복지 진흥계획('18~'22)'으로 정책 집행력이 제고됨
  - 산림복지정책은 복지서비스 대상의 확장 및 지역 균형 발전,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산림복지정책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와 산림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함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로 수혜 대상을 확장하고, 지역 사회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권에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추진함
  -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가로수, 정원 등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해양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치유 및 국민 휴양·복지서비스 정책 마련 착수

- 산림 부문에 비해 휴양 및 치유, 복지 개념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농어업인 복지 관련 정책 중 관련 내용은 미미한 수준임
  - 2004년 농어업인 생활 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간접적으로 치유의 개념이 가미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책사업으로의 연결성은 낮았음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5~'19)은 법률의 복지·치유 개념을 반영해 구체적인 농어업인 복지정책을 도출함

- 해양 부문의 치유 및 휴양·복지정책은 농촌 및 농업인과 함께 묶여 다루어지면서 해양 부문만의 특징 및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함
- 정책 대상이 어촌, 어업인의 경제·정주여건 개선에 한정되며,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국민 휴양·복지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은 비교적 최근 시작됨
  - 2017년 10월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4개 협력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현재 정부의 해양치유정책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치유산업 도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양치유산업 도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이용 의사는 거의 절대적

■ 해양수산부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이용 의향에 긍정적

- 19세 이상 국민 5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9%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5.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은 국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해양수산 분야 정책 우선순위가 환경과 안전에 있다고 보며, 다음으로 해양치유 활성화와 소외계층 해양휴양·복지 사업을 높이 평가함
  - 해양휴양 ·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중독 방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91.6%로,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음

- 특정 해양자원의 효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바다 경관, 즉, 바다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높이 평가함
- 응답자들은 해양치유를 통해 질병치료보다 건강증진을 기대함
  - 해양치유 공간과 시설, 이용 요금, 안전과 환경 등 해양치유서비스 이용 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중시함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며, 관련 인력 양성 시 기존 직업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해양치유정책 추진 및 산업화를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공간 조성,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법률적 기반 마련 필요

- 치유·웰니스 시장의 성장, 삶의 질 개선,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치유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구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해양치유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는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마련, 해양치유 서비스 공급 체계 마련

-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해양치유정책과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정책의 도입·추진을 위해서는 인식 확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함
-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에 해양치유 효능 관련 연구결과 자료 제공, 해양치유 체험 행사 추진, 해양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일반인, 학계, 산업계가 해양치유정책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발굴을 통하여 해양치유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리센터 조성·지정 및 지역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 인프라의 운영을 위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하도록 함
- 해양치유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치유법(가칭)을 제정하고, 해양치유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해양치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미얀마 수산 성장 엔진, 국립수산대학 설립 ODA 사업으로 밝혀야	2018.10.12.
제2호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2018.10.12.
제3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물류인력 양성 서둘러야	2018.10.13.
제4호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8.10.18.
제5호	자율운항선박으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 실현	2018.10.18.
제6호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제를 중심으로-	2018.10.25.
제7호	표준계약서 및 장기 계약 제도 도입으로 컨테이너 화물 해상 운송 계약 관행 개선	2018.10.25.
제8호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18.11.01.
제9호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2018.11.01.
제10호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2018.11.08.
제11호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2018.11.08.
제12호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 정보 생산·활용 방안	2018.11.15.
제13호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2018.11.15.
제14호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2018.11.22.
제15호	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전략	2018.11.22.
제1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2018.11.29.
제17호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8.11.29.
제18호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9.1.17.
제19호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 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9.1.17.
제20호	신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2019.1.31.
제21호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2019.02.08.
제22호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2019.02.22.
제23호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2019.02.28.
제24호	페루 수산업 현안과 수산 협력 방안	2019.03.14.
제25호	신뢰구축과 단계적 접근으로 서해평화수역 조성 추진 필요	2019.04.05.
제26호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2019.04.11.

URL: https://www.kmi.re.kr/